

시선

사설

흔들리는 학생 정치
근본적 고민 필요할 때

서울캠퍼스(서울캠) 50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무산돼 서울캠 총학은 학칙에 따라 5월에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가뭇바이 여길 일이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학생의 권익을 대표할 대표자가 없는 상태다. 당장 등록금정책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의 구성원이 모인 회의체를 비대위가 대응해야 한다. 대동제와 같은 행사도 비대위가 떠안아야 한다. 양 캠퍼스의 학생대표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들도 발이 묶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재수강제도 개선 TF나 캠퍼스 간 셔틀버스 증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국제캠퍼스 총학이 재수강제도 변경 반대 노선을 정하고 현재 총학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과 달리 서울캠은 ‘언젠가 선출될 새 총학’에 논의를 미뤄야 한다.

비단 우리대학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서강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이 한 해 내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2016년 선거가 무산된 이후 올해까지 2년째 대표자가 없어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사례도 있다. 연세춘추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는 구성원과의 소통, 캠퍼스 간 사업, 대학본부와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며 대동제, 새내기 맞이 행사 등 이어져 오던 사업안을 끊이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비대위는 선출직이 아니기에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모호하다. 심지어 서울캠 학생회칙에는 비대위 구성과 역할에 대한 규정 자체도 없다. 현재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이희완(사회학 2014)씨는 총동아리연합회 비대위장과 총학 비대위장을 겸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쳤다고는 하나 회칙에도 없는 단체가 서울캠 재학생을 대표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학생 정치가 달라졌다.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직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학생회 조직 활동의 무게중심은 학생 복지와 관련한 사업으로 옮겨갔다.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원부터 경력을 쌓으며 학내 정치를 습득하고 성장해 나가는 열성적인 자원은 더더욱 보기 힘들다. 제 한 몸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대이니 학생사회의 권익을 위해 일할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달라진 상황에 맞게 새로운 학생정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기존 절차에 따라 선출된 학생대표가 공식일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준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비대위 형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성 정치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까지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명의 대표자와 그를 중심으로 한 선봉 단위로 꾸려지는 학생회에서 탈피해, 작은 단위의 대표자가 모인 회의체나 의제별로 임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과감하게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참여 민주주의가 일상으로 파고든 지금, 그리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배웠던 기억을 가진 구성원이 모인 지금이야말로 대표자가 없는 상황을,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고민할 최적기로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지금

서남대 폐교, 학생 ‘낙동강 오리알’

지난 7일 이화여대 자치교지 <이화>(이화교지)가 학생저 학생지원팀(학생지원팀)에 의해 사전 검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교지내용 사전검열> vs <사실관계 확인일뿐>)이대학보, 2018.03.12) 이화교지는 별도의 지원 없이 자치단위로 제작하는 교지로 발간 이전에 외부에서 사실 확인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이 이화교지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이화>에 실린 조형예술대학(조예대)에 대한 글을 조예대 행정실로 전송했다. 이에 이화교지 측은 언론 검열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생지원팀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검열을 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한양대에서 ‘지인합성’을 일삼던 남학생이 서울 성동경찰서를 통해 검찰 송치될 것으로 밝혀졌다.(지인얼굴에 알몸 합성해 가지고 다닌 대학생 퇴학처분/중앙일보, 2018.03.15) 학교 측은 지난 2일 퇴학조치를 내렸다. 해당 남학생은 지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지하고 다녔다. 가해자의 범죄행각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습득한 사람이 피해자 중 한명의 얼굴을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비리사학으로 논란이 있었던 서남대가 최종적으로 폐교됐다.(문 닫은 서남대, 그리고 남겨진 것들/대학신문, 2018.03.11)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의 교비 횡령 창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서남대 구성원은 폐교 이후 처우에 대해 미리 고지받지 못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재학생들은 교육부의 특별편입학조치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해 편입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교직원들은 이직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이홍하 전 이사장의 또 다른 학원법인인 ‘신경학원’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비리의 뿌리를 채 뽑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주의 주제 - 진정한 화합

말 뿐이 아닌 화합을 위해



지난 9일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했지만 어째 미디어에서는 조용하다. 국내 공영 방송사들의 중계시간이 21시간, 15시간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KBS, MBC 등이 지난 13일에서야 중계를 늘리겠다고 나섰다. 이미 패럴림픽 24개 종목, 55%가 진행된 시점에 중계를 늘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편성 시간 늘리기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찝찝함만 남는다.

KBS, MBC가 시청자들의 민원에 의해 늘린 패럴림픽 기간 내 늘린 중계시간은 총 41시간, 35시간이다. 반면 개최국도 아닌 미국의 NBC는 94시간, 영국의 채널4는 100시간을 편성했다. 동계 패럴림픽은 1976년부터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올림픽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중계를 뒷전으로 한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서 패럴림픽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걸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송 중계를 하지 않으면 장애인 시청자의 접근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장애인은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계는 화면해설과 수화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시청자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가 정작 가까운 구성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몇몇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중계를 안 해주는데, 과연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개최국이 대한민국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이처럼 말뿐인 화합이 우리학교에도 있다. 지난 달 둘째주부터 각 단과대학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새내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신문이 지적했던 것처럼, 장애학생을 모집하는 단과대학들도 장애학생을 위한 안내나 안전수칙이 없어 장애 신입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에 진행된 입학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도 대학 측은 입학식 행사 때 휠체어 외에는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간 지체장애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끌고 평화의 전당으로 향하는 급한 경사로를 올라야 했다. 올해 입학식은 진눈깨비가 내려 경사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돼 특히나 위험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이동수단 제공이나 안전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입학식을 진행했다.

우리 학교는 홈페이지에 경희정신을 언급하며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공적 실천의 장으로서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명백하게 소외되고 있는 구성원이 매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신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다만 앞으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패럴림픽 정신과 우리학교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해나가길 바란다.

미투 운동 대응책은
배척 아닌 ‘위드유’

세시봉

설지연 <국제 뉴실팀장>



국내 미투 운동이 연일 뜨겁다. 미투 운동과 함께 유명해진 단어가 있다. 바로 펜스룰이다. 펜스룰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발언에서 유래했다. 그는 “남성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 성적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훗날 미국 제48대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이를 인용했고 이때부터 펜스룰이라 불리며 세간에 퍼지게 됐다. 즉 펜스룰의 본래 뜻은 성직자로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펜스룰의 의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여성과 아예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마저 뜻을 오용하고 있다. 지난 3일 조선일보는 펜스룰을 다루며 ‘남자 직원들이 미투에 연루되기 싫어 여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이라 보도했다.

해석이 잘못된 펜스룰이 퍼지며 이는 성추문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폭력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된 대부분의 사건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큰 권력 앞에서 힘없는 약자는 최소한의 저항조차 할 수 없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며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을 이슈로 끝내지 않으려면
근본적 원인 직시하고 해결책 강구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줄 때다.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우리 사회의 치부가 드러난 순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력 관계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펜스룰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서는 벗어난 미봉책이다. 여성과 일을 하지 않으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면 여성과 일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듯하다. 여성과 함께 일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여성의 존재가 성 범죄의 원인이라느니 앙수를 풍긴다.

피해자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투 운동이 그저 이슈거리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용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위로이며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